

#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1-5호

발행일 : 2021. 12. 24. (금)

제391회 국회(정기회, 2021. 9. 1. ~ 12. 9.)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은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 목 차

### 1. 개관

###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 가. 지속가능발전
- 나. 주택 정책
- 다. 디지털 전환
- 라. 산업안전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의 출처는 링크된 원문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 1. 개관

제391회 국회(정기회)는 12월 9일 본회의를 끝으로 100일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2021년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군인권 향상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 병역의무대상자에게 병역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4)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5)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한 경우 ‘분양가에 상한’을 두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6) 부동산 차명투자 범죄수익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조치로 폐업하는 경우에 대해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신설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8) 명절 기간 동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능액 범위를 두 배로 상향(20만 원)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산업 디지털 전환’ 추세에 따라, 산업데이터 관련 정책의 추진 체계와 지원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 (11) 뇌연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는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동물병원 진료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동물소유자등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임신 중인 근로자가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출산한 자녀가 부상 등을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보험금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이번 국회(정기회)의 12월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107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국회운영위원회(3)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운영위원장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운영위원장
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운영위원장
4	법제사법위원회(1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7	법제사법위원회(1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의원 등 11인	
11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현 의원 등 10인	
12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현 의원 등 12인	
13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현 의원 등 10인	
1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 등 10인	
1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16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 의원 등 14인	
17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등 10인	
1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 의원 등 14인	
1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의원 등 10인	
20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장	
21		정무위원회(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2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23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25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대안)		정무위원장	
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2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의원 등 11인	
2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의원 등 14인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30	정무위원회(1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 의원 등 15인
3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3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 의원 등 11인
3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 의원 등 11인
3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 의원 등 10인
3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 의원 등 15인
36	기획재정위원회(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3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38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39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 의원 등 10인
4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4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42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14)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43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 등 12인
4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 등 12인
45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 등 13인
46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 등 12인
47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4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의원 등 10인
49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 의원 등 15인
5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 의원 등 17인
5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 등 10인
5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5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54	국방위원회(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55		6·25 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의원 등 13인
5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 의원 등 10인
57	문화체육관광위원회(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 의원 등 15인
58	행정안전위원회(1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59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6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61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6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6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6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6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67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68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69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70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7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등 10인
7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7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7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의원 등 11인
7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의원 등 10인
7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 등 12인
7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7)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78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7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80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17)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81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8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83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84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 의원 등 10인
85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 의원 등 10인
8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 의원 등 12인
8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의원 등 10인
88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의원 등 24인
89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의원 등 26인
90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의원 등 10인
91		수산증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 의원 등 10인
9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 의원 등 10인
9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의원 등 10인
94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장
95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장
9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 의원 등 10인
9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의원 등 11인
98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의원 등 10인	
99	환경노동위원회(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10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1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10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03	환경노동위원회(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10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10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106	국토교통위원회(3)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10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의원 등 11인

이번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지속가능발전, 주택 정책, 디지털 전환, 산업안전 이슈를 다룹니다.

## 2. 주요 법정책 이슈

### 가. 지속가능발전

#### 개요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을 뜻합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적 흐름 속에 2008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법을 기반으로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UN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하면서, 우리도 범부처간 협의와 국민참여를 기반으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했습니다.

12월 9일 본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현행 「지속가능발전법」은 폐지됩니다(안 부칙 제2조).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제안이유에서 지속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사회·환경을 포괄하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된 많은 법률안이 이와 관련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정무위원회	<p><b>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대안)</b></p> <p>경제·사회·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이 경제·환경만을 포함하는 “녹색성장”에 비해 포괄적인 상위개념인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관련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p> <p>[주요내용]</p> <p>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 등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등 6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 시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둠(안 제17조·제20조). K-SDGs의 4개 전략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이해관계자 협력 등의 규정으로 구체화하여 제5장의 시책으로 규정(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국제규범 대응 및 국회 보고 등(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p>	2021-12-9 (원안가결)
2	농림수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p><b>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b></p> <p>오늘날 수산업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목적 조항에서 “어업의 민주화” 개념을 삭제하고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개념 등을 도입하며, 수산업의 지향점이 생산 증대에서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변화하였으므로 “생산성 향상”을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대체함.</p>	2021-12-9 (원안가결)
3	농림수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p><b>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b></p> <p>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확대하고, 자급목표를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며,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시키고 먹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임.</p>	2021-12-9 (원안가결)



## 정책 동향

### [100대 국정과제]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

#### 과제목표

'2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 대비 상당한 수준 감축 실현  
기후변화 리스크를 예측·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사회 구현

#### 주요 내용

(지속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18년~)하여 사회·경제 전반의 지속성 제고 및 기후·대기·에너지정책 통합성 제고

- '18년 2030 지속가능발전 국가목표·비전 및 이행전략 수립·확정

(온실가스 감축 강화)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등 온실가스 배출증가 억제

- '17년 배출권거래제 전담부서 조정 추진 및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 '18년 에너지세제개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 '20년까지 제로에너지 건물 확대, 중·대형차 온실가스 기준 신설, 공공기관 배출량 30% 감축, 폐자원에너지 활성화 등 부문별 감축 강화

(기후적응 역량 제고) 사회 전반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 평가·점검체계 구축

- '18년 공공기관 적응보고제 도입 등 기후변화 적응 역량 평가 제도화

- '19년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및 전국 적응위험지도 작성

- '20년까지 기후변화 입체감시망 및 종합정보체계 구축

(범지구적 논의 동참) 파리후속협상 참여 등 국제사회 역할 강화

- '18년부터 국제 배출량 검증 상호인정체계 구축, 해외 배출권 확보를 위한 개도국과의 양자협력 메커니즘(협정 등) 마련



###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21~2040)

#### 비전

포용과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국가 실현

#### 전략과 목표

전략	사람	번영	환경	평화·협력
전략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	지구촌 평화와 협력 강화

K-SDGs 17개 목표	<p>[목표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p> <p>[목표2] 식량안보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p> <p>[목표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p> <p>[목표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p> <p>[목표5] 성평등 보장</p> <p>[목표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p>	<p>[목표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p> <p>[목표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 기반시설 구축</p> <p>[목표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p> <p>[목표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p>	<p>[목표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p> <p>[목표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p> <p>[목표13] 기후변화와 대응</p> <p>[목표14] 해양생태계 보전</p> <p>[목표15] 육상생태계 보전</p>	<p>[목표16] 평화·정의·포용</p> <p>[목표17] 지구촌 협력 강화</p>
---------------------	--	--	--	--

관련 :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 관계부처 합동 2021. 2. 16.

## 참고 자료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 검토보고](#) 국회 정무위원회 2021. 8.

김병욱 의원안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 검토보고](#) 국회 정무위원회 2021. 2.

한정애 의원안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 제정

[UN 지속가능발전목표\(국영문 대역본\)](#) 환경부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8. 지속적·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15. 육상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17.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ESG 생태계 조성 및 입법정책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21. 9. 16.

앞선 I ~ V 장에서 ▲국내 ESG정책 동향, ▲국회 상임위 논의, ▲입법안 분류 및 검토, ▲ESG 법제 해외사례, ▲전문가 의견수렴 등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회의 ESG 입법 방향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음. (...) ESG를 표방하는 대표적 입법흐름은 공적금융 운용 방침에 ESG를 고려하도록 규정하려는 시도들인데, 비록 선언적 수준이라도 ESG 개념을 투자자와 경영자 모두가 받아들여야 하는 당위를 부여하고, ESG 저변확대의 기반이 되는 법률안으로서 의미가 있음. 국회가 ESG논의를 이어감에 있어 필요한 기본 검토방향 및 우선 순위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특히, ESG 규제 및 장려 정책, 공시에 필요한 논의, 평가기관의 문제 등 최근 자주 논의되는 아젠다를 중심으로 ESG 연착륙 방안을 제언함.

### 우리나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20. 12. 31.

우리나라의 유엔 SDGs 이행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첫째, 유엔 SDGs의 국내·외적 이행을 실질적으로 통합한 비전 및 전략이 제시되어야 함. 둘째, 국내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의 유엔 SDGs 이행을 총괄할 수 있는 일원화된 범 정부적 통합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셋째, 민간부문의 조직적 참여를 좀 더 강화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넷째, 유엔 SDGs 관련 통계 및 지표 자료가 좀 더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이를 일반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섯째, 국회차원에서도 이를 통합하여 검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2020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 -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점검 및 지표평가 결과 -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20. 9.

K-SDGs는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 국제 비교가 가능한 지표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SDSN이나 OECD와 같은 방식으로는 평가를 할 수 없다. 국제 기준에서 우리나라는 절대적 빈곤, 기아, 문맹률, 상·하수도 보급, 과학 연구 등과 같은 주요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충분히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SDSN이나 OECD와 같은 국제 비교 기반 평가에서 한국의 지속가능성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난다. (...) 평가 결과 K-SDGs 수립 당시의 목적과 반대 추세를 보이는 지표들은 아래와 같다. K-SDG 3. 장애인 만성 질환 유병율(%) (...) K-SDG 4.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율(%) (...) K-SDG 6. 국민 1인당 상수도 사용량(ℓ/일/인) (...) K-SDG 8. 전체 GDP에서 관광분야 기여율(%) (...) K-SDG 12.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kg/인·일),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 (...) K-SDG 13.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MtCO<sub>2</sub>) (...) K-SDG 15.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 (...) K-SDG 17 개도국에 대한 투자 규모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토·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2020. 6. 29.

향후과제 (기본방향) ① 국익과 국제사회 기여의 조화, ②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화, ③ 단위사업 중심에서 종합적·체계적 지원으로 이동. 정책과제 ①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체제의 적극적 수용) 국제적 규범에 기초한 국토·도시 부문 개발협력전략을 마련하고,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가별 국토·도시 부문 개발협력전략 수립. 정책과제 ② (한국 국토발전경험의 재구축과 활용) 한국 국토발전경험을 국제적이고 현존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활용한 플래그십(flagship) 프로젝트 기획·추진. 정책과제 ③ (국토·도시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대) 국제기구의 국토·도시 분야 의제설정에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다자협력사업 활성화

### SDGs 달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윤리 브리프스」 2019. 5. 29.

SDGs 이행의 대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의 규모, 업종, 활동 국가나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준수하며, 국제 기준들을 지지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기 위한 준법 경영을 넘어서 기업이 보유한 핵심역량 및 자원과 기술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즉 SDGs의 달성을 위해 기여해 나가야 합니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해서 먼저, 기업의 가치 사슬 전반에서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는 영역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영역을 산업별·지역별 특성에 맞게 파악하여, 우리 기업이 중점을 두어야 할 SDGs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기업의 KPI(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되, 동종업계나 기존 관행을 넘어서, 사회에의 기여를 고려한 보다 높은 목표를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국제논의 동향과 정책제언 - 과학기술혁신 국제협력정책을 중심으로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Insight」 2020. 4.

동 연구는 'SDGs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혁신(STI for SDGs) 국제 논의 동향, 국제기구의 STI 이니셔티브 동향, 주요국의 STI ODA 동향' 등 크게 세 분야의 국제 동향을 분석. (...) SDGs 대응을 위한 단기·중장기 과학기술협력 추진방향. 가. (단기) SDGs for STI 대응 전문적·체계적인 참여기반 구축. (...) 나. (중기) STI 정책관련 국제 네트워크 참여 및 국제공동연구 추진. (...) 다. (중·장기) 연구기금을 운영을 통한 연구 중심 STI ODA 정책 추진. (...) 라. (중·장기) 국제기구 STI 이니셔티브와 연계한 STI ODA 사업 추진.

## 나. 주택 정책

현 정부는 '주택 공공성 강화'를 부동산 정책의 핵심기조로 함으로써, 주택 정책은 경기 부양 내지 조절 수단이나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투기수요를 근절하는 등 주택수요를 관리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한편 서민 부담을 경감시키며,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2월 9일 본회의에서는 이러한 정책에 부응하여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국토교통위원회	<p><b>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b></p> <p>민·관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p> <p>또한, 민·관공동출자법인의 민간참여자에게 배분되어야 할 개발이익이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주민생활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비용 등으로 재투자하도록 함.</p> <p>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민간참여자가 출자 지분 범위 내에서만 조성토지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p> <p>국토교통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p>	2021-12-9 (원안가결)
2	국토교통위원회	<p><b>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b></p> <p>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용·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도 공공성이 있으므로 국가 등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상한제 등을 적용함으로써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함.</p>	2021-12-9 (원안가결)
3	법제사법위원회	<p><b>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b></p> <p>범죄수익 환수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를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범죄수익의 환수가 필요한 죄를 벌표에 열거하여 중대범죄에 포함하는 ‘혼합식’ 규정 방식을 도입.</p>	2021-12-9 (원안가결)

## 정책 동향

[100대 국정과제]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국토부)

### 과제목표

장기 공적임대주택 확대 공급 및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가구 등 주 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

### 주요 내용

(공적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 및 공공지원 임대주택 연평균 4만호 공급 등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국토부)

### 과제목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

### 주요 내용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22년까지 20만호 (전체의 30%) 임대주택 신혼부부 공급 (준공기준)  
- 신혼부부 특화주택 건설 및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개선) 임대주택 입주 시기 예측을 위해 대기자 명부제도를 도입하고,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여 관리 효율성 제고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주거급여 지원대상 지속 확대 및 지원금액 단계적 현실화, 주거약자 용 주택 입주자 선정 시 중증장애인 우선 공급  
(사회통합형 주택정책) 자발적 임대주택의 등록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도화 추진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상향 (주거비용 지원 강화) '18년에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대출 상품 출시 및 저소득 신혼부부 대상 주거비 경감 지원 실시 (청년 임대주택 약 30만실 공급) 임대료가 저렴한 세어형 임대주택 (5만실) 및 역세권 등 주변 청년주택 (20만실) 공급, 기숙사 확대 (5만 명) 등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목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전략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 유도		실수요·서민을 위한 공급 확대	
과열지역에 투기수요유입차단	실수요 중심 수요관리 및 투기수요 조사 강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기과열지구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전역, 경기 과천, 세종</li> </ul> </li> <li>◆ 투기지역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11개구, 세종</li> </ul> </li> <li>◆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li> <li>◆ 재건축·재개발규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li> <li>• 재개발 분양권 전매 제한</li> <li>•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상향</li> <li>• 재건축 등 재담침 제한 강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소득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주택자 증과 및 장특배제</li> <li>• 비과세 실거주 요건 강화</li> <li>• 분양권양도세율 인상</li> </ul> </li> <li>◆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기지역 내 주담대 제한 강화</li> <li>• LTV·DTI 강화 (다주택자)</li> <li>• 중도금 대출요건 강화 (인별→세대)</li> </ul> </li> <li>◆ 다주택자 임대등록 유도</li> <li>◆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특별 사법경찰제도 도입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 택지 확보</li> <li>◆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연간 10만호</li> </ul> </li> <li>◆ 신혼희망타운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만호 (수도권 3만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제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요건 강화, 가점제 확대 등</li> </ul> </li> <li>◆ 지방 전매제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시 6개월, 조정대상지역 1년 6개월~소유권이전 등기시</li> </ul> </li> <li>◆ 오피스텔 공급·관리 개선</li> </ul>


- 관련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2017. 8. 2.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2017. 11. 29.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계부처 합동 2018. 9. 13.  
2019년 주거종합계획 국토교통부 2019. 4. 23.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관계부처합동 2019. 8. 12.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관계부처합동 2019. 10. 1.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합동 2019. 12. 16.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국토교통부 2020. 2. 20.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관계부처합동 2020. 6. 17.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 주택공급 목표

- '25년 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호 주택 공급부지 확보
  - 수도권 약 61만호 (서울 약 32만호) + 5대 광역시 등 약 22만호
  - 공공분양(70~80%) + 공공자가 · 공공임대(20~30%) 혼합 공급
- 주거뉴딜 추진을 통해 다기능 임대주택을 전국에 공급
  - 사회서비스 연계 + 혁신공간 연계 +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연계

#### 기본방향

- 1) 주민 희망 시 공공주도 Fast-track 옵션 제공  신속한 공급
  - \* 공공기관(기획), 정부 · 지자체(인허가), 민간(창의적 설계·시공), 전문가(개발구상)
- 2)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 공급
  - \* 도심 내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와 신규 공공택지를 활용
- 3) 생활인프라, 혁신공간, 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공급
  - \* 단지내 커뮤니티시설, 도시교통 인프라, 일자리 창출 공간 등과 연계된 주택 공급
- 4) 수요자가 선호하는 주택 공급(임대주택은 돌봄·육아·일자리 등 연계)
  - \*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혼합 공급
- 5)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 \* 개발이익은 생활 SOC 구축 등에 사용하고, 투기수요는 면밀하게 관리

#### 추진전략

신개발모델 도입 + 정비·재생사업 활성화 ⇔ 도시구조 개편 + 주택공급 확대

- ① 신규 가용지 (역세권 · 준공업 · 저층주거지) : 신개발수단 + 도시기능 재편
- ② 재개발 · 재건축 : 공기업 직접시행 ⇔ 획기적 인센티브 + 절차단축
- ③ 도시재생 : 재생사업과 정비사업 연계 ⇔ 실행력 제고 + 주택공급
- ④ 소규모 정비 : 소규모 재개발 + 기존사업 유연화 ⇔ 개발 사각지대 해소
- ⑤ 공공택지 : 수도권,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 15곳 내외 신규 지정
- ⑥ 단기 주택확충 : 비주택 리모델링 + 매입임대 확대 등 전세대책 보완

관련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관계기관 합동 2021. 2. 4.

## 참고 자료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1. 12.

이헌승 의원안, 진성준 의원안, 김희재 의원안 : 민·관 공동출자법인의 민간 출자지분 및 이윤율 제한 등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1. 12.

이헌승 의원안, 김교홍 의원안 : 공공택지의 범위 확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1. 3.

이주환 의원안 : 중대범죄에 주택 전매행위 제한 위반 및 공급질서 교란의 죄 추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1. 2.

조용천 의원안 : 중대범죄 기준에 기준식 규정 도입

[2021 한국인권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1. 12. 6.

[제2부] 집중조명 : “주거권 : 현실과 정책적 대안”

[발제 1] 주택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주거정책 방향 – 공공택지, 공공주택, 민간임대차 정책을 중심으로

[발제 2] 저소득층의 주거현실과 주거복지

[발제 3] 한국의 사회주택 – 제3섹터 주택공급의 겨울나기

[발제 4] 지방소멸과 국토균형발전방안

[‘차기 정부의 국토도시 정책 이슈와 과제’ 제2차 정책세미나 개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21. 12. 10.

우리 학회에서는 “차기 정부의 국토도시 정책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 시리즈를 기획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미나는 “개발이익환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토도시계획의 어깨에서 개발이익환수라는 짐 내려놓기, 개발이익환수와 주거안정, 민관합동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련 : [차기 정부의 국토도시 정책 이슈와 과제 - 2회차](#) 도시TV\_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21. 12. 8.

[발제 1] 국토도시계획의 어깨에서 개발이익환수라는 짐 내려놓기

[발제 2] 개발이익환수와 주거안정

[발제 3] 민관합동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평\]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적었던 정기국회 입법 성과](#) 참여연대 2021. 12. 10.

국회에는 택지개발사업 등에서 민간사업자의 개발부담금 부담율을 제도 도입 당시인 50%로 원상복구하는 개발이익환수법,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개발 시 민간매각 비율을 20% 이하로 낮추고 80%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이 중에서도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지역의 경우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정기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6개 지역에서만 민간사업자들이 10조 6천억원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은 둔 채, 극히 일부인 민관합동개발의 미비점만 보완하는 것으로 제2의 대장동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



**관련 : [\[입법토론회\] 대장동의 교훈 : 공공택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진성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2021. 11. 10.

[발제 1] 민관합동 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제 2] 공공택지 민간 매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청년 주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21. 11. 1.

최근 청년층의 고용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거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청년 주거불안 문제는 한층 심화되고 있음. (...) 현재 시행 중인 주요 청년 주거지원 제도로는 크게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 주택 특별공급 제도, 전·월세자금 등 주거비 지원 제도 등이 있으며, 향후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음. 청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양적 측면에서 임대주택의 공급물량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청년층의 주거수요를 반영한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주택분양 제도개선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 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그 외에도 청년 거주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함.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1. 8.

정책 제언 □ 주택정책 및 부동산 산업·조세정책 분야 [국토연구원 수행] 1)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부동산감독원(가칭)의 역할 제고 2) 부동산 산업의 업역 확장 및 업종의 법정 대상화 3) 단기 대응전략: 전담기관을 통한 강력한 단속 4) 중기 대응전략: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시스템 활용 5) 장기 대응전략: 주택정책의 공감대 형성. □ 부동산 금융정책 분야 [주택금융연구원 수행] 1) 실수요자 중심의 LTV 규제 기준 마련 2) 거래관련 정보 공유의 확대 3) 공적보증기관의 심사기능 강화 4) 에스크로우제도와 권원보험의 점증적 확산 5) P2P, 온라인뱅크, 대부업 관련 감독규정 마련. □ 부동산 형사정책 분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수행] 1) 최우선 과제: 펀드의 부동산 투자 관련 법제의 정상화 2) 민간투자법상 부대사업 목록 및 국민연금 등 기금증식사업에서 주택 관련 사업 전부 삭제 3) 상속·증여세제 개혁 및 특혜성 조세감면제도 전면 폐지 4) 피고인 사망 또는 법인 해산·합병 시 공소기각 예외조항 마련 5) 대물적 보안처분으로서의 몰수 또는 독립몰수 근거규정 마련 6) 영리 목적 부동산거래 관련 공적 정보 제공·재가공 또는 인터넷 게시 금지 7) 한국부동산원 업무범위에서 통계·지수 및 가격공시 관련 업무 전면 삭제

**[공공임대주택 공급동향 분석과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2020. 12. 30.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공급동향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책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예측가능한 공급계획 (...) ■ 주민 수요 및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공급 (...) ■ 공공임대주택 노후화에 대한 대응 (...) ■ 품질 확보 및 질적 개선 (...) ■ 지자체의 역할 강화 검토. (...)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재정지원이 필요한데, 과거 30년간의 공공임대주택 재정 지원 성과를 검토해볼 때, 다음과 같은 과제가 확인되었다. ■ 공급계획과 자원조달계획간 연계 (...) ■ 재정 지원 기준마련 (...) ■ 임대자산의 활용방안 모색 (...) ■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활용.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 - 서울 주택시장, 8·2 대책, 9·13 대책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12.

본 연구에서는 2017년 8. 2 대책, 2018년 9. 13 대책이 서울의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을 규제지역 지정의 효과, 종합부동산세 인상의 효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주택시장 데이터 분석과정에서 발생하는 추정

의 편의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패널데이터를 구성하여 패널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에 추가적으로 보다 엄밀한 정책효과의 식별을 위해 Panel BDD(boundary discontinuity design)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특정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정책은 단기적으로만 주택가격 인상률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단기적인 효과의 크기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지역간-지역내 주택가격격차가 확대되어가는 추세를 완화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의 경우는 일부 주택가격대에서 주택가격 상승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으나 기존 주택가격 인상률과 비교하여 그 효과가 미미하였다.

## 다. 디지털 전환

### 개요

디지털 전환이란 생산, 유통 등 경제활동 전반이 정보통신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체제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많은 부문에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한국판 뉴딜 등 정책기조 속에서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에도 불구하고, 고용 감소 등 부정적인 면도 있어 이를 함께 보완해야 합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디지털전환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p><b>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대안)</b></p> <p>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산업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관한 활용·보호 원칙을 제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또한,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정부 내 추진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p> <p>[주요내용] ‘산업데이터’, ‘산업 디지털 전환’ 등의 개념을 정의. 산업데이터의 활용·보호 원칙을 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추진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설치함.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항도 규정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반을 마련.</p>	2021-12-9 (원안가결)

## 정책 동향

### [100대 국정과제]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과기정통부)

#### 과제목표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 및 핵심 기술력 확보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양성 및 ICT 역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응

#### 주요 내용

(4차 산업혁명 대응)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17년 8월) 및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 수립('17년 3분기)

(생태계 조성) 지능정보 핵심기술 R, 인재양성 등에 집중투자하고, ICT 신기술·서비스 시장진입이 원활하도록 규제 개선 추진

(인프라 조성 및 융합 확산) 5G·IoT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데이터 개방 및 유통 활성화, 스마트홈·정밀의료 등 ICT융합 서비스 발굴·확산  
- '17년 IoT 전용망 구축, '18년 10기가 인터넷서비스 상용화, '19년 5G 조기 상용화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소프트웨어 법체계 및 공공시장 혁신, 인재·기술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하는 나라, 소프트웨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실현

(역기능 대응) AI 기반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체계 구축, 신정보격차 해소계획 수립·시행, 통신분쟁 조정제도 도입 등 이용자 보호 강화



### 한국판 뉴딜 2.0 -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

#### 비전

대한민국 대전환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  
선도형 경제, 탄소중립 사회, 포용적 성장으로 진화하는 대한민국

#### 추진과제 : 디지털 뉴딜

□ 뉴딜 1.0의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

- 디지털 융·복합을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여 메타버스·클라우드·블록체인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데이터 구축,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등 ICT 융합 비즈니스 지원
    -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 촉진, 대규모 블록체인 확산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디지털시대 핵심 기반기술 육성
  - 국민생활·지역사회 등으로 디지털 뉴딜 1.0의 성과 확산 유도
    - 마이데이터·가명정보 등 민간 데이터 활용 촉진\* 및 6G 국제공동연구 협력체계 구축 등 D.N.A 생태계 강화
- \*마이데이터 쏠분야 확산(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가명정보 결합·활용 지원

- 교육, 의료 등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중소기업 소상공인 디지털화\*\* 확산 등 실생활에서 국민이 체감 가능한 성과 확대
  - \*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확산, 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 보급, 원격교육 제도화 등
  - \*\* 소상공인 점포 특성에 맞는 스마트기술(IoT, AI) 보급으로 스마트상점 질적 고도화 등
- 스마트시티 고도화\*, 스마트산단 지속 조성 등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여건 확산
  -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의 데이터허브 확대 구축, 스마트산단 혁신데이터 센터 간 데이터 활용방안 공유 등

관련 : [한국판 뉴딜 2.0 -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 관계부처 합동 2021. 7. 14.

## 참고 자료

###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검토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 11.

조정식 의원안, 고민정 의원안 :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데이터 권리 보호

###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 검토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 2.

양금희 의원안 : 기업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디지털 전환과 여성노동의 미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WDI 이슈페이퍼」 2021. 11. 10.

기술발전이 여성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바라보는 전문가와 관리자 간의 관점에 차이가 있었음. 관리자들은 여성인력의 감소가 전체 인력의 감소보다 심하지 않다고 보았고, 전문가들은 전체 인력보다 더 심할 것으로 예측함. 관리자들은 현재 직무에서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본 반면, 전문가들은 다른 직무로의 전환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함.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측되는 기술 발달과 관련하여 여성들이 많이 근로하는 저숙련 사무직 일자리의 직무가 명확하게 전문화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파악됨. 기술발전에 따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유연하게 하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기존 노동 시장에서 나타나는 임금 및 직종별 성별 격차를 완화하고 여성노동의 질을 더 나아지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필요함.

### [전기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2021. 10. 25.

전기사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전기사업 자체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재생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기술 수용을 하기 위함이다. 지능형전력망 구축 등 전기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 시 다음 사항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기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둘째, 디지털 기술은 전력망 기술의 혁신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혁신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 셋째, 기술과 제도의 조화를 찾아야 한다. 특히 기계의 판단에 의한 사회시스템 운영은 장기적으로는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갈등의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NARS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21. 9. 30.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법부 자체적으로 디지털 사회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체계를 구비해야한다는 점이

다. 사실 입법부는 다원적 가치들이 논해지는 의사결정 구조를 상정하고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본원적으로 갈등관리에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입법실무 절차와 구조는 새로운 디지털 갈등에 대응함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갈등과 같은 구조적 차원의 사회 혁신과 전환은 현재 변화하고 있는 사회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수범자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입법·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갈등관리 및 조율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입법과정과 실무는 이러한 지점에 있어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될 때, 디지털 갈등을 안정적으로 해소 및 조율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2차년도) 활동 보고서(2019.10.16.~2020.10.7.)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1. 3. 19.

활동개관 / 제25차~제44차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제1차~제7차 디지털 플랫폼 노동 : 배달업종 분과위원회 결과

#### 디지털 전환과 가치창출. 디지털 기반 제조서비스의 유형화와 성장 결정요인 분석

산업연구원 「ISSUE PAPER」 2021. 9. 9.

디지털 기반 제조서비스는 도입기업인 제조기업의 성과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제조를 통한 가치창출을 주도함. (...)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산업환경에서 디지털 기반 제조서비스는 가치창출과 스마트 제조혁신을 주도하며 경제 성과를 창출함. (...) 이에 따라 스마트제조의 궁극적 목적인 지속적 가치창출을 위해서는 국내 디지털 기반 제조서비스 기업의 역량 강화와 지속 성장이 필수적임.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마트제조 정책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국내 디지털 기반 제조서비스 기업의 성장에도 효과적이었음이 확인됨.

#### 디지털 시대의 노년층: 포용 혹은 소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Perspectives」 2021. 6. 4.

과기정통부의 2020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 대비 72.9%이며 고령층은 68.6%로 정보취약계층 중 가장 낮은 수준. (...) COVID-19로 고령층의 PC를 통한 인터넷 이용량은 큰 변화가 없으나 모바일기기를 통한 인터넷 이용량 변화는 34.7%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 (...) COVID-19로 고령층의 PC를 통한 인터넷 이용량은 큰 변화가 없으나 모바일기기를 통한 인터넷 이용량 변화는 34.7%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 (...) 한국은 정보통신 강국으로 고령층이 정보통신 접근에서 소외되지는 않고 있으나, 정보통신의 이용과 활용 및 참여의 측면에서는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음.

#### 디지털 전환의 중소기업 수용성 제고방안 산업연구원 「i-KIET 산업경제이슈」 2020. 12. 2.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논의함에 있어 디지털 전환이 단순히 생산과정의 최적화나 생산성 향상 차원을 뛰어넘어 디지털 기술의 적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한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 각종 연구·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높지 않으며 내용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적 요소와 운영역량 등 많은 기능적 필요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추진상 제약요인이 적지 않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용성 제고가 관건적 요소인 것으로 파악됨. 수용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전환의 기대 편익에 대한 비전 제시와 체계적 실태 파악 및 정책반영이 중요하며, 실행이 용이한 디지털 전환 모델 및 구동형태의 연구 및 보급·확산, 내실 있는 교육·훈련프로그램 확충에 힘써야 함.

## 라. 산업안전

### 개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최근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OECD 국가 중 1만 명 중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상하는 한편,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해왔습니다.

12월 9일 본회의에서는 산업안전관련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환경노동위원회	<b>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b>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해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그 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3장의3(제91조의12부터 제91조의14까지), 제103조 등).	2021-12-9 (원안가결)
2	법제사법위원회	<b>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b>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 직무 범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중대산업재해 양벌규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과 관련한 범죄를 포함하려 함(안 제6조의2).	2021-12-9 (원안가결)

### 정책 동향

[100대 국정과제]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고용부)

#### 비전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 종합적 해소 추진  
외주근로자, 감정노동자 등 보호 강화

#### 주요 내용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추진\*,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 방안 마련

\*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사유제한의 범위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규정

(차별 없는 좋은 일자리)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1년 미만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퇴직급여 보장 등

(원청 공동사용자 책임)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및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파견·도급 구별 기준 재정립

(임금격차 해소) '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소상공인 등 부담 완화 방안 마련, 공정임금 구축 등 임금격차 해소 추진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 특수고용노동자 등 보호대상 확대, 도급인의 산업 재해 예방 의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강화

-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보호 사각지대 해소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 금지 등 제도 개선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비전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

### 추진과제 : 안전망 강화

#### 1. 고용·사회 안전망

- ①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 ②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 ③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 ④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 ⑤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 2. 사람투자

- ①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 ②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제로 개편
- ③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관련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관계부처 합동 2020. 7. 14.

한국판 뉴딜 2.0 -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 관계부처 합동 2021. 7. 14.

##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 비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대한민국

### 목표

산재 사망 감축 및 안전·보건 격차 완화

\* 사고사망만인율 19년 0.46% → 24년 0.2%대

### 정책과제

#### 1. 안전한 일터를 위한 법과 제도의 현장 안착지원

- ① 의무 주체와 보호대상 확대
- ② 원청과 하청이 함께하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 ③ 화학물질 관리기준의 정립 및 실행

#### 2. 산재 사망사고 감축

- ① 주요 사고 사망 요인 집중 관리
- ② 안전보건 주체별 역할 강화
- ③ 빅데이터(Big-Data) 기반의 사업장 지도·감독

#### 3. 산업보건 사각지대 해소

- ① 업무상질병 발생 단계별 관리 강화
- ② 유해요인별 사각지대 해소

#### 4.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 ① 자율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현장 작동성 제고
- ②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지원

#### 5. 안전·보건 인프라 확충 및 문화 확산

- ① 안전보건 정보 등에 관한 공유와 참여 확대
- ② 안전·보건 교육 실효성 제고
- ③ 안전보건 문화 확산

관련 :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고용노동부 2020. 7.14.

## 참고 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20. 9.

박주민 의원안 : 태아 건강손상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20. 9.

장철민 의원안 : 태아 건강손상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20. 11.

이영 의원안 : 태아 건강손상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21. 2.

강은미 의원안 : 태아 건강손상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21. 6.

송옥주 의원안 : 태아 건강손상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1. 3.

이수진 의원안 : 근로감독관 특별사법경찰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 부여

[산업안전 관련 사업주 처벌 국제 비교 및 시사점](#) 한국경영자총협회 2021. 12. 16.

조사대상 국가들 중 ①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망자 없는), ② 사망자 발생(반복 사망 포함) 시 처벌수위(법정형)는 모두 한국이 가장 높았고, ③ 원청의 책임범위는 주요 선진국들과 다른 법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3) 외국 및 국내 사례를 보더라도 사업주 처벌강화 입법의 산재감소 효과는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사고사망자를 효과적으로 낮추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예방중심의 산업안전정책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었음. (4) 결론적으로 한국은 외국과 비교해 이미 산업안전 관련 처벌수위가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경영자에게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추가로 도입하였음. (5) 사고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도 과도한 처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존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규제(법 집행)방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예방중심의 산업안전정책 수립과 사업주 추진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사업체 특성별 산업재해 현황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KLI 패널브리프」 2021. 11. 10.

이상의 기술통계 분석에서 산업재해 발생과의 관련성이 확인된 요인들에 입각하여,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장단기 방안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단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강화는 재해발생률을 낮출 것으로 기대되며,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시간의 감축도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향후 피할 수 없는 고령화 경향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위험을 동반한 단순반복적 직무에는 자동화 등의 기술적 지원도 병행되어야 함. 산업재해발생의 취약부문이라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체, 생산직이나 단순직이 많이 종사하는 사업체, 제조업 사업체 등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원을 보다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법제도 변화 이후 산업안전 수준 제고를 위한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 연구」 2021. 9. 10.

이상의 논의들을 기초로 노·사·정 주체별로 과제를 다시 정리하였는데, 노동조합의 경우 기존의 산업안전 활동이 다른 고용 및 임금 요구와 혼재되거나 노사 담합으로 흘렀던 잘못된 관행들은 극복하면서, 상급단체 수준에서는 전략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기업과 작업장 수준에서는 사용자의 일차적 책임을 전제로 노사협조적으로 접근하며, 불안정한 행동을 극복하는 데 동참할 것이 제안되었다.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들은 추격형 경제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여 필요한 안전투자를 확대하면서, 안전

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자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대응책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업종별, 지역별 활동을 강화할 것이 제안되었다. 정부의 경우는 이러한 노와 사의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업종마다 다른 안전 저해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것이 제안되었다. 아울러 기술적인 지원 역시 리빙랩 방식 등 각 주체들의 참여를 통한 설비와 장비 개발 방식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며,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근로자대표제 개선 방향을 입법화하는 등 여전히 불비한 법제도에 대한 정비 작업도 계속 해나가야 할 것이다.

#### ‘태아산재’ 인정 반영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통과, 환형과 함께 여성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방향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0. 12. 31.

태아산재 인정은 오래동안 여성 개인에게 맡겨져 왔던 임신과 출산, 양육 더 나아가 인간의 생식 활동에 관련된 건강과 활동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렇기에 이번 법 개정은 끝이 아니라 여성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싸움의 시작이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중인 근로자’로 규정했기 때문에 아버지인 남성 노동자의 업무로 인한 건강손상은 해당되지 않는다. 남성 노동자의 업무로 인한 태아에 대한 영향과 질환도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고, 임신 중인 근로자로만 제한할 경우 임신과 출산, 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성 노동자까지 확장이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급여 내용 중 휴업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이 제외된 것도 변화가 필요하다.

#### OECD 국가의 건설업 산재 사망사고 실태 비교·분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0. 9. 29.

OECD 국가와의 비교·분석 결과, 국내 전체 및 건설산업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경제(GDP), 고용(근로자 수), 안전(사고사망자 수 등)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OECD 평균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었음.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일명 중대재해 기업살인법과 같은 징벌 중심의 조치는 건설안전 개선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경제와 고용 측면에서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음. 국내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는 추가적인 징벌과 규제가 아니라 국내 건설산업의 안전관리를 포함한 다방면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하고 가이드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임신노동자 및 태아의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개선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2020. 5. 31.

「근로기준법」에서는 12개 업무에 대해서만 임신노동자 금지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변화하는 산업구조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일하게 혈액을 매개로 감염되는 B형간염 및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 2종에 대해서만 임신노동자에게 업무를 제한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임신노동자의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태아가 장애를 가지고 출생한 경우 그 자녀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에서 보상해주지 않는다. 임신노동자와 그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어머니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는 분리될 수 없는 동일체이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의 특성을 고려한 산재보험 급여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 2017~2021 국가인권위원회 2017. 2. 24.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증진 방안 (1)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용자 책임 및 근로자 참여 강화(재권고) (2)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사용자, 근로자 교육 강화(신규) (3) 사업장의 산업재해 미신고에 대한 행정감독 및 제재(신규) (4)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신규) (5) 산업재해

보험 승인심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 분담 등 제도개선(신규) (...) 사회보험 적용범위 확대. 현행 법령상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근로자(일정금액 이하의 소규모 공사 근로자, 가사사용인, 5인 미만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종사 근로자)와 해외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보험 적용방안 마련(재권고)

###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 · (사)지평법정책연구소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대표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최정호 선임연구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jhc@jipyong.com

지평 공공정책팀 · 지평법정책연구소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